

## 검정수탁 신청의 대상이 된 기술사시험제도와 기술사의 위상



**朴 炅 珍**

(Park, Kyoung Jin)

정보통신기술사, 행정학박사,  
한국기술사회 부회장,  
(주)부광네트워크 대표이사,  
E-mail : pkj4748@chol.com

노동부는 2004년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하여 검정업무의 민간 위탁을 확대키로 했다. 2007년 「원자력발전기술사」, 「방사선관리기술사」 등 30여개 종목에 7개 기관이 검정업무 수탁을 신청하였고, 평가결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영화진흥위원회가 신규검정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 「원자력발전기술사」, 「방사선관리기술사」등이 수탁희망기관으로 검정업무가 이관되어 2008년부터 관련 기술사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분리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2008년에도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정보통신자격자협회 등 8개 기관이 「정보통신기술사」, 「광해방지기술사」 등 41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수탁 희망하여 현재 평가 중인데 평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기술사 검정업무의 분산 운영은 기술사 종목간의 질 문제와 위상의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사태인 것이다. 기술사법이 있는데도 기술사 검정 근거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존속되어 선진국 제도에 유례가 없는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와 연계선상에서 나열되어 전문 자격제도의 틀이 뒤틀려 있다. 전문자격 제도의 관점에서 보면 독자성이 결여된 궤도 이탈 현상인 것이다. 기술사검정의 종목별 시행기관 분산의 가속화가 진행 된다면 국가 간 기술사 상호인정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뒤틀린 제도로 기술사 위상이 저하되는 것도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기술사검정 분산 시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한국기술사회는 이를 강력히 저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차제에 기술사 검정 근거를 기술사법으로 환원하여 전문 자격인 기술사제도 정상화를 확실히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전문가에 대한 주무부처가 종목에 따라 다른 것도 문제이며 그동안 기술사 주무부처는 기술사 제도 발전과는 역행하여 기술사와 대등한 학·경력 기술자 양산으로 기술사 자격을 크게 훼손하였다. 국가기술자격을 총괄, 관리하는 노동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므로 제도운영에 크게 실망해 온 터이다. 이제라도 관계 공무원은 부처 이기주의 차원이 아닌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한 미·일 기술사법 체계와 국내 다른 전문가 법체계와 비교하여 기술사법의 보완 개정에 합의해 줘야 한다. 21세기는 과학기술이 실질적으로 경제사회의 발전을 주도하는 지식기반사회이므로 산업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 기술사들은 능동적으로 정부 정책의 실패를 막아야 할 것이다.